

예산 · 재정정책 정보

- △ 본 정보지는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 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재·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 △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2)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목 차

I. 경제분야 (3건)

- 1.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2023. 5.) [기경위]3
- 2.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영애로사항(2023. 5.) [기경위]4
- 3. KDI 경제동향 요약(2023. 5.) [기경위]5

II. 재정분야 (6건)

- 1. '23년 4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기경위·행문위]6
- 2. 186개 지자체, 추경편성 완료 [기경위]7
- 3.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기경위]9
- 4.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 효과 [기경위]10
- 5.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로 재정누수 최소화 [기경위]11
- 6.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 [기경위]12

III. 정책분야 (9건)

- 1.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및 안전성 증진 방안 [행문위]14
- 2.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복환위]15
- 3.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및 시사점 [농수위]16
- 4. 전세사기 대책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건소위]17
- 5. 지방부 도로 보행자 안전제고 방안 [건소위]18
- 6. 스마트건설 : 건설사업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 [건소위]19
- 7.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방안 모색 [교육위]20
- 8. 인공지능 교사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교사의 가르침이란? [교육위]21
- 9.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실시 [교육위]22

IV. 법률 제·개정 (2건)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수위]23
-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위]24

V. 지역 동향 (6건)

- ※ 천안·아산·보령·당진·부여·홍성·예산 25

I. 경제 분야

1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 (2023. 5.)

- 5월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5월 중 95.9로 전월(91.7)보다 4.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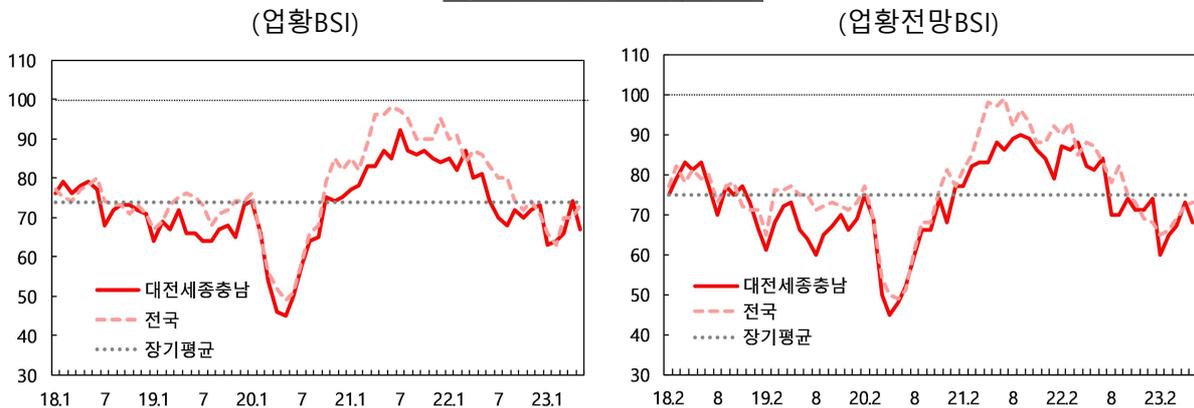
구성지수의 기여도

	2022년				2023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심리지수 ¹⁾	90.0	86.6	87.0	88.9	87.9	89.7	89.7	91.7	95.9	
<전 국>	91.6	89.0	86.7	90.2	90.7	90.2	92.0	95.1	98.0	
(전월 대비 지수차)	0.0	-3.4	0.4	1.9	-1.0	1.8	0.0	2.0	4.2	
구 성 지 수의 기 여도 (p)	현재생활형편	0.5	-0.5	-0.3	0.3	-0.6	0.0	0.8	0.5	0.5
	생활형편전망	0.0	-0.5	-0.2	0.5	0.0	0.3	0.2	1.0	0.5
	가계수입전망	0.8	-1.1	0.4	0.0	0.0	1.1	-1.1	0.4	0.8
	소비지출전망	-0.9	-0.4	0.0	0.0	-0.3	0.7	-0.3	-1.0	1.3
	현재경기판단	0.0	-0.3	0.3	0.4	-0.1	-0.3	0.3	0.5	0.7
	향후경기전망	-0.4	-0.6	0.2	0.7	0.0	0.0	0.1	0.6	0.4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성한 종합지수

- 5월 중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는 전월보다 7p 하락(74→67)하였으며, 6월 중 업황전망BSI도 전월보다 5p 하락(73→68)
 - 대전지역은 5월 중 업황이 전월보다 4p 하락(68→64)하였으며, 6월 중 업황전망도 전월보다 1p 하락(66→65)
 - 충남지역은 5월 중 업황이 전월보다 7p 하락(75→68)하였으며, 6월 중 업황전망도 전월보다 6p 하락(74→68)

제조업 업황BSI¹⁾ 추이²⁾



※ 대전세종충남지역 소재 830개 법인기업(대전 309개, 세종 84개, 충남 437개)

출처 :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본부)보도자료 재작성(2023. 5.)

2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영애로사항 (2023. 5.)

- **(제조업)** 경영애로사항 중에서 불확실한 경제상황(20.3%)의 비중이 가장 높고, 내수부진(16.2%), 원자재 가격 상승(12.4%) 등이 뒤를 이음
- 전월에 비해서는 수출부진(+6.9%p), 자금부족(+1.3%p)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인력난·인건비 상승(-4.4%p) 및 불확실한 경제상황(-2.3%p)의 비중은 하락

제조업 경영애로사항

(% , %p)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인건비 상승	수출부진	자금부족	기타/없음
'23.4월(A)	22.6	16.2	13.0	15.5	2.5	6.3	23.9
'23.5월(B)	20.3	16.2	12.4	11.1	9.4	7.6	23.0
증감(B-A)	-2.3	+0.0	-0.6	-4.4	+6.9	+1.3	-0.9

- **(비제조업)** 경영애로사항 중에서 인력난·인건비 상승(28.7%)의 비중이 가장 높고, 내수부진(16.6%), 경쟁심화(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월에 비해서는 경쟁심화(+2.9%p), 내수부진(+2.0%p)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불확실한 경제상황(-2.5%p), 인력난·인건비 상승(-1.9%p) 및 자금부족(-1.0%p)의 비중은 하락

비제조업 경영애로사항

(% , %p)

	인력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경쟁심화	자금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불확실한 경제상황	기타/없음
'23.4월(A)	30.6	14.6	8.9	11.0	6.9	9.4	18.6
'23.5월(B)	28.7	16.6	11.8	10.0	7.1	6.9	18.9
증감(B-A)	-1.9	+2.0	+2.9	-1.0	+0.2	-2.5	+0.3

※ 대전세종충남지역 소재 830개 법인기업(대전 309개, 세종 84개, 충남 437개)

출처 :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본부)보도자료 제작성(2023. 5.)

- (경기)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하락세는 진정되는 모습
 - ※ 제조업 평균가동률(68.9%→72.2%),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외수요의 위축
- (소비) 서비스업생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소매판매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
 - ※ 3월 소매판매는 전월과 유사, 서비스업 생산은 관광객 유입과 대면활동 확대로 높은 증가세 지속
-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며 부진한 모습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작년 말에 건설자재의 수급 차질로 지연되었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단기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
 - ※ 3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21.7%)에 이어 15.4%의 높은 증가율, 건설수주(경상)는 -44.4% 증가율을 기록하여 6개월 연속 감소, 다만 건설 관련 심리지표는 상승세 지속
- (수출)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 ※ 4월 수출(-14.2%)은 전월(-13.6%)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수입은 주요 에너지원(-12.2%→-27.7%)과 이를 제외한 부문(-4.0%→-7.4%) 모두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월(-6.4%)보다 낮은 -13.3%의 증가율 기록, 무역수지(-46.3억달러 → -26.2억달러)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며, 3월 교역조건 (-4.6% → -5.1%)은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함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 (물가)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의 약화로 상승세가 둔화됨
-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해외 은행권 부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함
-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매매거래량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
- (세계경제) 글로벌 서비스업 심리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경기둔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제작성(2023. 5.)

II. 재정 분야

1 '23년 4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 '23년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9조원* 감소

-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8.9조원 감소
- (법인세)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5.8조원 감소 * 8~10월 법인세수: ('21) 25.6조원 → ('22) 34.3조원 <+8.7조원>
- (부가가치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3.8조원 감소
-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7조원 감소

세목	구분	'22년 실적	'23년 예산	4월 당월			4월까지 누계			4월 진도율		
				'22년	'23년	증감 (증감율)	'22년	'23년	증감 (증감율)	'22년	최근5년	'23년
■ 총 국 세		395.9	400.5	56.8	46.9	△9.9 (△17.5)	167.9	134.0	△33.9 (△20.2)	42.4	37.8	33.5
■ 일반 회 계		385.2	390.3	55.0	45.4	△9.7 (△17.6)	163.9	130.5	△33.4 (△20.4)	42.5	37.8	33.4
○ 내 국 세		352.3	358.0	52.5	43.3	△9.2 (△17.5)	153.9	122.6	△31.3 (△20.4)	43.7	38.5	34.2
- 소 득 세		128.7	131.9	9.3	7.5	△1.8 (△19.5)	44.6	35.7	△8.9 (△19.9)	34.6	31.5	27.1
- 법 인 세		103.6	105.0	20.3	11.3	△9.0 (△44.4)	51.4	35.6	△15.8 (△30.8)	49.6	38.7	33.9
- 상 속 증 여 세		14.6	17.1	3.2	3.1	△0.1 (△3.0)	6.5	6.0	△0.5 (△8.0)	44.6	35.2	35.0
- 부 가 가 치 세		81.6	83.2	17.6	19.4	1.8 (10.1)	39.7	35.9	△3.8 (△9.6)	48.7	47.4	43.1
- 개 별 소 비 세		9.3	10.2	1.0	0.9	△0.0 (△4.0)	3.4	3.3	△0.1 (△2.8)	36.9	35.8	32.8
- 증 권 거 래 세		6.3	5.0	0.6	0.6	0.0 (5.6)	2.6	1.9	△0.7 (△28.6)	41.6	37.8	37.6
- 인 지 세		0.8	0.8	0.1	0.1	0.0 (4.1)	0.3	0.2	△0.0 (△14.3)	35.8	34.6	30.0
- 과 년 도 수 입		7.3	4.8	0.4	0.4	△0.0 (△10.3)	5.3	4.0	△1.4 (△25.9)	73.0	74.5	82.6
○ 교 통 에 너 지 환 경 세		11.1	11.1	1.0	0.9	△0.1 (△5.1)	4.2	3.5	△0.7 (△15.8)	37.7	34.4	31.6
○ 관 세		10.3	10.7	1.0	0.5	△0.5 (△52.0)	3.8	2.4	△1.4 (△37.9)	36.7	33.6	22.0
○ 교 육 세		4.6	4.7	0.6	0.7	0.1 (12.7)	1.7	1.8	0.1 (6.3)	37.0	36.0	38.8
○ 종 합 부 동 산 세		6.8	5.7	0.0	0.0	△0.0 (△50.6)	0.3	0.2	△0.1 (△26.3)	4.1	8.5	3.6
■ 특 별 회 계		10.8	10.2	1.8	1.5	△0.3 (△14.3)	4.0	3.5	△0.5 (△13.2)	37.4	38.2	34.3
○ 주 세		3.8	3.2	1.0	0.8	△0.2 (△19.9)	1.8	1.6	△0.1 (△8.2)	47.4	48.7	51.0
○ 농 특 세		7.0	7.0	0.8	0.8	△0.1 (△7.7)	2.2	1.9	△0.4 (△17.2)	32.1	32.3	26.6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작성(2023. 5.)

2

186개 지자체, 추경 편성 완료

- 행정안전부가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186개 지자체가 총 19조1천억원(당초예산 423조9천억원 대비 4.5%) 규모의 추경을 편성
- 먼저 세입 측면을 보면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
 - 2023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조2천억원(△8.7%) 감소 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1조9천억원)와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2천억원)
- ※ 1분기 국세 수입도 8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24조원, △21.6%)
 -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소득세 감소(△7조1천억원) 및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6조8천억원)

(2023년 5월31일 기준, 일반+기타특별회계, 총계)

구분	세입항목별 추경 예산(19조1천억)								
재원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타 회계·기금 전입금	세외 수입	조정 교부금	지방세 수입	지방채	기타
금액 (비율)	6조3천억 (32.7%)	4조7천억 (24.4%)	3조9천억 (20.2%)	1조5천억 (8.1%)	9천억 (4.8%)	7천억 (3.9%)	9백억 (0.5%)	4백억 (0.2%)	9천억 (5.2%)

- 세출 측면에서 보면 각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사업을 추경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시·도별 주요 추경 사업으로는 부산의 경우 엑스포 해외 유치활동 추진(98억원),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63억원), 울산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179억원)와 지방채 상환(500억원) 등을 반영
 - 강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225억원)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95억원), 전북은 세계잡버리 개최준비(75억원) 등을 반영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재작성(2023. 6.)

참고 1

광역 자치단체별 주요 추경사업 현황

※ 5.31. 기준 지방의회 확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구분	추경 규모 (당초예산 대비 비율)	주요사업
부산	7,158억원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200억원), 수소버스 보급(91억원) ♦ (국고보조 외 의무지출) 자치구 조정교부금(800억원) ♦ (자체사업) 엑스포 해외 집중 유치활동 추진(98억원) 등
인천	7,986억원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1,729억원) 등 ♦ (국고보조 외 의무지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2,816억원) ♦ (자체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63억원), 아동학대예방(72억원) 등
광주	1,216억원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008억원) ♦ (국고보조 외 의무지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230억원) ♦ (자체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비(50억원), 영세소상공인임대료지원(47억원) 등
울산	4,463억원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성암소각장 재건립(232억), 태풍힌남노 피해복구(172억원) ♦ (자체사업) 지방채 상환(500억원), 공공병원 건립(240억원) 등
강원	5,321억원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249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115억원) ♦ (국고보조 외 의무지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129억원) ♦ (자체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225억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95억원) 등
충북	3,431억원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외 의무지출) 지방교육세 전출금(328억원), 조정교부금(200억원) 등
충남	6,970억원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기초연금(763억원), 생계급여(229억원) 등 ♦ (자체사업)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161억원) 등
전북	3,534억원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사업)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지원(75억원) 등
경북	5,176억원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국지도건설사업(232억원), 산림병해충방제(107억원) ♦ (국고보조 외 의무지출) 지방교육세 전출금(715억원) ♦ (자체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100억원) 등
경남	834억원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연근해어선감척(283억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127억원) 등

□ 기획재정부는 5.17일 수요일부터 5.24일 수요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 본격적인 예산편성 전 재정당국과 지자체 간 재정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사업 관련 의견교환('09~)

○ 올해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1:1 미팅 방식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김완섭 예산실장은 특히 올해는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이를 위해 지난 2월 지역별 현장방문, 3월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을 위한 시·도 재정정책자문회의, 4월 시·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지속 강조해왔다고 밝힘

○ 금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최종 정부안 국회 제출 전까지 중앙과 지방간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

□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뿐만 아니라 로봇·전기차, 콘텐츠·관광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반영 필요성을 개진할 계획

○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역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검토할 계획

○ 또한,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유인책(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 설계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

□ 지역 건의사업이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면, 각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한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작성(2023. 5.)

□ 행정안전부는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고,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

- 그 결과, 연간 약 500만 명의 국민이 4천 26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채권 표면금리 인상) 약 384만명의 국민이 3천800억원의 매도 할인금액 감소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면제) 사회초년생 등 76만 명이 400억원의 금전 혜택

(2천만원 미만 계약 면제) 소상공인 등 약 40만명이 연간 60억원의 금전 혜택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제도개선으로 3월 이후 1,600cc 미만 승용차 계약이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임

- 전문건설협회는 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도 좋지만,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교통 불편, 채권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채권 만기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더라도 할인율이 종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건설업체에 도움이 된 사례를 소개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라며,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함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재작성(2023. 5.)

5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로 재정누수 최소화

□ **우발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보증채무부담행위)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자가 미상환시 자치단체가 대신 상환(지방재정법 제13조)

** (예산 외 의무부담)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협약 조건 충족시 자치단체가 의무부담(지방자치법 제47조)

○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

○ 또한,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 우발채무 분류 개선 >

기존	개선	
	분류	유형
보증채무 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자산유동화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 외 의무부담	예산 외 의무부담	공공토지 비축협약
		부지매입 확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 아울러,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함

○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제작성(2023. 5.)

① 예산총칙에 기준인건비 항목 이용 사전 승인시 의결없이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예산 이용 가능 여부

A1.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그 경비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기준인건비를 미리 정하여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별도의 의회의결 없이 예산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예산편성 당시 의결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회의결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통계목에 국외연수 관련 비용을 편성할수 있는지

A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의원역량개발비(205-08)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로, 의원역량개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육일 경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이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면서 국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국외 연수업체를 통해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면 편성 가능할것이나, 국내 민간 위탁 교육기관에서도 수강 가능한 교육일 경우 국내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명시시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기준은?

A3.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이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이월 사유 발생 시 지출원인행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명시이월을, 원인행위 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인행위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고이월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④ 조직개편 시 동일 회기 의결이 아닌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따라 이체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A4. 예산 이체는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변경 조례(안)이 동일 회기 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에 이체하는 것으로 조직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예산서 편제 후 변경 조직에 맞게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 시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의결 시 예산총칙에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시하였고 그 다음 회기에 조직변경 조례가 의결되었다면, 예산의 이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내용으로 예산서를 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의 하부조직인 지역협의체에 부담금 예산편성 가능 여부

A5.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르면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도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협의체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의 하부조직이라면, 지방자치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통권67호) 제작성(2023.)

III. 정책 분야

1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및 안전성 증진 방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적법성과 적합성 문제

-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이 강화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적법성과 적합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

□ 문제시설 및 개선방향

- (시중점 설치 위치 불일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에는 가로형 통합표지와 노면표시를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가로형 시점표지 이전에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거나 시점과 종점이 같은 방향으로 설치되어 운전자 혼란 야기
- (시중점 시설 미설치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종점표지 및 노면표시 미설치 사례 발생
- (노면 인식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노면에 ‘어린이 보호’ 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을 써야 하고, 속도제한 노면표시 또한 적색 띠를 두른 표시여야 함
- (속도저감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과속방지턱 오르막 표시에 적색 포장이 누락되거나, 오르막표시 자체가 없는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시인성 부족 및 노후화) 시점 표지가 나무 등에 가려지거나 노후화되어 노면 표지가 지워진 경우
- (보행 공간 미확보 및 보행 동선 단절) 보도가 미설치된 보호구역 또는 보도 폭이 매우 협소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성 향상을 위해 정기 점검 실시, 차량과 어린이들의 보행 동선 분리를 추진해야 함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2023년 4월호 제작성(2023. 4.)

- **(현황)**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 하락추세에 있으며 OECD 중 최하위를 기록
 -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며 출생아수도 25만명 미만을 기록
 -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0.8명), 평균 출산연령 최고(33.1세), 비혼출산비중 최저(2.2%)
- **(출산지원정책)** 2021년 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16.2조원, 자체사업은 2.9조원임
 -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총 규모 16.2조원 중 대응지방비는 5.2조원으로 약 32.1%를 차지
 - **(자체사업)** 자체사업의 규모는 2.9조원으로 작은 편이나 부모 보육료지원 및 아동 양육시설 지원,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운영중임
- **(정책의 효과분석)** 기초 지자체 단위로 2009~2021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됨
 -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고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상승시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
 - 동일한 예산액 지출일 경우 인프라 예산액의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정책제언)** 현재의 서비스·인프라 확대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시켜 다양하고 특색있는 비현금성 정책 실시할 필요
 - 무분별한 현금지원정책은 지자체간의 과도한 현금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
 - 돌봄센터 및 어린이회관 설립 등 인프라 확대는 인프라 수혜 후 전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정책이면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될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적·단일성 있는 현금지원정책과 함께 지자체 특색에 맞는 돌봄서비스·인프라 정책 실시할 필요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제97호 제작성(2023. 5.)

□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나, 불분명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공유, 가치에 대한 분배 방식 등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도 저하
 - ①농업인들은 데이터 소유, 이동성, 개인 정보 보호 및 책임과 같은 문제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주저
 - ②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농업 데이터의 특성과 권리 및 관련 거버넌스 등 구체적 운영 방안 미흡

□ 제고 방안 및 시사점

- 농업 데이터에 대한 농업인들의 소유권과 이용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 마련 필요
 - ①과편화되고 불분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된다면, 잠재적으로 디지털 농업을 채택하려는 농업인들의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②데이터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에서 농업 데이터 제공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
 - 이미 주요국(미국, EU, 일본, 호주 등)은 농업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에 관련된 자발적 규칙 및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통해 농민의 데이터 소유·이용권을 보장하는 추세
-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농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 설립 노력 필요
 - ①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수립, 농업인 중심의 농업 데이터 조직 설립으로 농가의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 필요
 - ②조직 설립은 선언적 의미인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한계, 데이터 생성과 저장의 독점 구조의 한계, 자유 시장에서 농업인들의 낮은 교섭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이슈 현안분석 재작성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2019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대책이 시행됨
 - 조세 분야에서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미납 조세정보 열람권이 강화되고 경·공매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순위가 조정됨
 - 또한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
- (전세사기 대책) 주택임대차보증금과의 관계에서 배분순위가 조정된 당해세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70여년 만에 개정됨
 - 그간 당해세 우선원칙은 그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판단을 받아 유지되어 옴
 - 특히 종합토지세는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 상속세는 상속재산임이 공시된 부동산에 한정하여 인정되었고,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판단된 바 없음
- (전세사기) 전세사기 문제에서 지목된 다주택자의 당해세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인 반면, 당해세 예외로 확보하지 못하는 재산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임차인에 적용되므로, 고가 아파트를 포함하여 역전세 등으로 경·공매되는 모든 주택 사례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줌
 -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년 과세하는 재산세는 경·공매 증가로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예외로 확보하지 못하는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임대차보증금) 당해세 우선을 배제한 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실태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추후 재논의할 필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한 것으로 바람직함
 - 또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스스로 낙찰받는 경우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그간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도 이해됨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제99호 제작성(2023. 5.)

□ 지방부 도로 보행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

- 2020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 수 비중은 선진국 수준보다 높은 35%를 차지, 특히 지방부 도로의 경우 안전속도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 읍면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4.6명이고, 동 지역은 1.9명

□ 국도 및 지자체 도로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 대표적 보호 사례인 마을주민 보호 구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국도를 대상으로 시행, 사고 건수는 약 30%, 사망자 수는 약 60%감소 효과
- 읍면지역으로 한정하였을 때 국도에서 보행사고 사상자 수는 전체 사상자 수의 약 10%, 지자체 도로에서 사상자 수는 약 70%를 차지하며 이를 볼 때 국도보다 지방부 도로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높음

□ 사망사고 확률이 높은 지방부 도로 보행사고 요인 조합

- 사망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요인 조합은 과속과 차도 위 통행이며 이러한 요인이 중첩되었을 때 사망 확률은 60%이며 과속 요인을 제거하면 사망 확률이 약 7%로 낮아짐
- 두 번째로 사망 확률이 높은 조합은 고령 보행자, 군도/시도/특별·광역시도, 야간, 물리적 중앙분리 시설이며 사망 확률이 약 51%이며 조명 설치로 야간 요인을 제거하면 사망 확률이 약 18%로 낮아짐
- 세 번째로 사망 확률이 높은 조합은 고령 보행자, 지방도, 야간, 대형차이며, 이 조합에서 사망 확률은 약 49%이다. 야간 요인을 제거하면 사망 확률을 19%로 낮출 수 있고, 대형차량 요인 제거시 사망 확률은 약 25%임

□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주요 개선 방안

- 가장 중요한 개선 방안은 통과 차량이 과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차로 폭을 좁히거나 유색 포장, 진출부 정지선, 횡단보도, 조명 및 반사경 설치 필요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지방부 도로 보행자 안전 제고 방안 재작성(2022. 10.)

□ 건설산업 생산체계와 상품 혁신 - 스마트화

- 건설산업의 오래된 과제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체계의 선진화로 컴퓨터가 소개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건설산업도 컴퓨터를 이용한 표준화된 생산체계로의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음
-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주택이나 도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삶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건설상품들이 발굴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건설 상품들이 실패하거나 사장된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명칭만 ‘스마트’ 하게 변경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음

□ 스마트건설과 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의 정체성

- (생산성 및 생산체계의 혁신) CIC¹⁾와 다른 스마트건설의 정체성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건설산업을 제조업화함으로써 표준화와 정형화된 산업으로 혁신하는 데에 있음 (건설산업의 제조업화, 프리콘 방식의 건설, 디지털 트윈)
- (건설상품의 혁신) 스마트기술이 건설상품에 접목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시설물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신시장 창출

□ 스마트건설의 방향성

- (생산프로세스 관점) 반복적이고 표준적인 생산체계를 밑바탕으로 한 건설산업의 제조업화와 더불어 표준부재의 조합을 통한 설계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부재의 표준화 필요
- (수요자의 관점) 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는 것만으로는 그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함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906호 제작성(2023. 5. 12.)

1) CIC는 건설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건설생애주기 모든 단계의 분절된 데이터를 통합),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건설사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로서의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차원 모델링(복잡한 건설대상물과 공사수행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계오류 및 공정계획의 최적 화를 위한 영상화(Visualization)), 건설자동화(Automation, 비표준화와 비정형화의 특성을 가진 건설사업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건설정보공유 등이 있음

7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방안 모색

○ 지방자치-교육자치 제도 연계 강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

- 최근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한편,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충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학계의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률적인 '지방자치-교육자치 분리'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방자치-교육자치 분리에 따른 문제점

● 행정적 문제점

-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보건, 돌봄 등 지역 내 복지와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학교 신설 등 다양한 지형태로 확장됨에 따라 지방자치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재정적 문제점

-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교육 관련 주요 환경 변화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과 관련한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 문제가 발생함

○ 지방자치-교육자치 제도현황과 연계·협력 필요성

- 미시적인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행정 및 재정 효율성과 교육 전문성 등을 통합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업·사무·분야 등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재작성 (2023. 5.)

□ 교사 정체성의 흔들림: ‘아는 존재’ 만으로 충분한가?

- 오랜 기간 교사는 ‘아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유지해 왔음
- ‘아는 것’ 과 관련하여 인간 교사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교사가 등장하면서 교사의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함

□ 인공지능 교사의 앎은 완벽한가?: 평균화와 동질화의 한계

- 인공지능 교사는 그 앎의 근거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평균적인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을 지향하게 되는 한계를 가짐
- 인공지능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은 평균을 향한 ‘거시적인 동질화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개별화 학습’ 이라고 볼 수 있음

□ 인공지능 교사와는 다른 인간교사의 가르침의 고유성: ‘모르는 존재’ 되기

- 교사가 ‘아는 것’ 을 전달하는 것만이 가르침의 전부가 아닌 이상, 인간 교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가르침의 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것을 ‘모르는 존재’ 되기라고 표현하고자 하며, 교사는 ‘아는 존재’ 가 아니라 ‘모르는 존재’ 가 될 때 인공지능 교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 디지털 전환 시대, 교사의 역할 재정립의 방향

-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 모른다는 자세로 비우는 것이 인간 교사의 가르침의 가치를 높이는 일일 수 있으며, 이 점이 인공지능 교사가 할 수 없는 ‘윤리적 가르침’ 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포럼(358호) 제작성(2023. 4.)

-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졸업 후 1년 이내 미취업자 포함) 1,350명 모집, 반도체, 디지털, 제약·바이오, 호텔·관광 등 45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월 60만 원 훈련수당 지급,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 지원 확대, 교육 수료 후 1년간 취업 연계 등 전년 대비 지원방안 대폭 강화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기술인재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채용 연계 및 기업 적응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 2023년도 사업은 35개 교육기관, 45개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
 -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11개 교육과정), 응용소프트웨어, 게임, 동영상기반 기술 등 디지털 분야(20개 교육과정), 식음 서비스 분야(3개 과정) 개설·운영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참여 학생 지원방안을 대폭 강화
 - 교육기간(3개월 내외) 동안 월 6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 거주지 이외 원거리 이동 학생을 위해 기숙사 수용 및 학생 식당 운영 비율을 총정원 대비 64% 수준으로 확대
 - 교육 수료 후 미취업자에게는 최대 1년간 취업 상담(컨설팅)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는 동 과정 이수 학생의 입직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후학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재작성(2023. 5.)

IV. 법률 제·개정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현황

- 발의자 : 윤미향 의원 등 10인
- 예고일자 : 2023. 6. 1.
- 예고기간 : 2023. 6. 1. ~ 2023. 6. 15.

○ 개정 이유

-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 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주요 내용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국회 누리집(입법예고, 2023. 5.)

○ 입법예고 현황

- 발의자 : 이원욱 의원 등 19인
- 예고일자 : 2023. 5. 4.
- 예고기간 : 2023. 5. 4. ~ 2023. 5. 13.

○ 개정 이유

-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 발생
- 해당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은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따른 것이 아닌 학부모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
- 이 배너 문제는 약 2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 기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재발해서는 안 될 문제임

○ 주요 내용

-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안 제30조의9),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여 시행하는 원격수업, 현장실습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학습 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 및 활동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출처: 국회 누리집(입법예고, 2023. 5.)

V. 지역 동향

1 [천안시] 제1회 추경예산 2,300억 원 증액 편성

○ 예산 규모 2조 6,100억 원으로 증가

- 천안시는 가스요금 인상 등 생활물가 안정 대책 마련과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 2,300억 원을 편성
- 이에 따라 천안시 예산 규모는 본예산 2조 3,800억 원보다 2,300억 원(9.7%)이 늘어난 2조 6,100억 원이 됨. 일반회계는 2,000억 원이 증가한 2조 2,100억 원, 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가한 4,000억 원

○ 일반회계 세입재원 및 세출예산

- 지방교부세 738억 원, 조정교부금 6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분 796억 원, 2022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로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에 20억 원, 지난 2월 천안사랑상품권 캐시백 한도 한시 상향 등을 반영한 할인 판매 보전금에 276억 원을 편성

○ 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95억 원,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조성 16억 원, 공영 주차장 확충 8억 원,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7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

- 도시계획도로 개설 106억 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앞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에 4억 원 등을 편성해 빠르게 통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 이 외에 기초연금 193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34억 원을 반영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 분야에 예산을 확충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164억 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8억 원 등을 편성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 이번 추경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4월 10일 의결을 통해 확정됨

출처: 천안시 보도자료 제작성 (2023. 4.)

□ ‘사회재난사망’, ‘상해사고진단’ 등 추가

- 아산시가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시민안전에 보험의 보장항목과 범위를 확대한다.
- 아산시에 따르면, 보험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과 ‘상해사고 진단’이 확대돼 시민들이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장 기간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임.
-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 △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 △ 대중교통 이용(전세버스 포함)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 △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 △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 △ 화상 수술비
- △ 물놀이 사고 사망
- △ 유독성 물질 사망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상해사고(4주 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등

출처 : 중도일보 기사 제작성(2023. 6.)

□ 도수로 활용해 금강 하천수를 보령댐으로 공급,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 일부 감량 댐에 비축

- 보령댐, 4월 29일 오후 19시를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
 -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보령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112mm로 예년 대비 56% 수준
 - 강우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령댐은 지난 3월 3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 후 약 2개월 만에 '주의' 단계에 진입
- 환경부는 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금강의 하천수를 보령댐에 보충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충청남도, 8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용수공급 추가 대책 결정
 - 보령댐 하류 하천(웅천천)의 건천화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하천유지용수의 44%(1.34만톤/일)를 댐 하류로 공급하지 않고 보령댐에 비축
 - 댐 하류로 공급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 실제 사용량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민들의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감량
 - 이번 조치로 월별로 배분된 농업용수의 약 10%(0.1만^m³/일~0.45만^m³/일)를 보령댐에 비축
- 한편, 보령댐의 총 저수량은 117백만^m³이며, 5월 현재 저수량은 30백만^m³로 예년 대비 71% 수준

출처: 보령신문 기사 재작성(2023. 5. 9.)

- ◆ 충청남도 도-시군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에 따라 유동인구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EDA(탐색적 분석), 공간분석 등을 사용하여 실시됨
- ◆ 분석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 기관은 충청남도, 당진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임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을까? (유입인구 분석)

- 2021년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삼교호를 찾은 사람은 515만 명으로 이전 연도인 2020년 대비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카드 소비 현황 분석

- 삼교호 카드 소비 금액은 당진시 대비 약 1.7% 차지(BC카드 기준)하고 있으며, 이용 건수는 1.6%로 전체 이용 건수 대비 카드 소비 금액이 유사함
- 삼교호 놀이공원 특성상 봄, 가을의 소비가 높은 특성이 있으며 농·축·수산물 품목이 전체 소비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삼교호로 내비 좀 찍어줘 (내비게이션 이동 현황)

- 삼교호를 목적지로 방문하는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당진시 전체 대비 삼교호를 목적지로 방문한 비율은 18.5%로 파악됨
- 삼교호 방문객이 다음 방문지로 정한 곳은 ‘ROAD1950’, ‘해어름카페’, ‘식스어클락카페’ 순이며 일부 타 지역(평택)으로의 이동도 파악되었음

○ 지속적 인구 유입과 지역 식당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

- 방문객이 20년도 대비 증가세를 보이므로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를 위한 인구 유입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1, 2월의 소비가 낮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며, 삼교호 방문객을 당진시 내 일반음식점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출처: 당진시청 누리집 제작성(2023. 5.)

□ 6월부터 지급**○ 지급대상**

- 첫 지급 대상은 2022년(지난해) 5월 18일~31일 부여군에 혼인 신고를 한 뒤 1년이 지난 신혼부부로서 총 4쌍이 대상
- 재혼 부부는 지급 가능하나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한 쌍당 700만원 지급
- 지역화폐(굿뜨래페이)로 3년에 걸쳐 3차례 분할 지급 (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결혼정착지원금 시행 이유는 지역 혼인 건수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

- 2015년 264건이었던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20년 145건으로 45.1% 감소
- 합계출산율도 0.81로, 충남 전체 합계출산율인 1.03보다 낮고 전국 합계출산율인 0.84보다도 낮음
- 부여지역 전체 행정리 중 84%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충남연구원)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2.5.18.)

제12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의 지원대상에게 결혼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결혼정착지원금은 부부당 700만원으로 하여 3회로 분할 지급하고 매회 지급액 전액을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③ 결혼정착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혼인 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 2차: 결혼정착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 3차: 결혼정착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

출처: 경향신문 기사 재작성(2023. 6.)

□ 홍성군은 5월 26일 ‘우수 사례 배움터’ 현장 방문차 홍성을 찾은 한국관광공사와 전국 DMO에 우수 홍성DMO 사례를 전파

- 홍성DMO사업단은 (주)행복한여행나눔(대표 김화영)이 2020년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 전국 유일 3년 연속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룸
- 우수 사례 방문지로는 ▲초록이동지 협동조합 ‘유기농 쌀로 만든 쌀방’ 체험(2021 로컬체험전문가 머물러 선정) ▲전통가옥을 활용한 한옥 숙소 ‘달마당 스테이’(2022 마을스테이 사업 선정) ▲‘더호봉카페’(2021 민간관광안내소 터-무늬 선정) 등 총 3곳을 방문
- 홍성DMO사업 사례 공유 : 2020년부터 민관산학연 거버넌스 ‘관광통’을 중심으로 로컬체험전문가 양성과정 ‘머물러’, 농촌숙박 개선지원사업 ‘마을나들이’ 등의 여러 기획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
- 2021년 로컬체험전문가 ‘머물러’ 양성과정을 통해 더욱 발전된 초록이동지 협동조합의 ‘유기농 쌀로 만든 쌀빵, 쿠키 만들기’ 체험을 진행
- 지난 4월 개소식과 함께 오픈한 ‘달마당 스테이’ 관람 : ‘달마당 스테이’는 홍성DMO사업단의 수익 모델로 위탁 판매를 하는 숙소로 2022년 홍성 농어촌 숙박시설 개선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인 마을나들이 사업에 선정
- 2021년 민간관광안내소 & 관광거점 ‘터-무늬’ 장소인 더호봉카페 소개와 간담회

□ 홍성DMO사업단은 2023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필수 사업인 ‘생활 인구 유입 증대 사업’으로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 프로그램과 ‘관광포럼’을 추진할 예정

출처: 홍성군 보도자료 제작성(2023. 5. 26.)

2)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지역관광추진조직: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경영하는 지역대표 관광조직

□ 예산군 인구가 5월말 기준 8만 1,120명 돌파, 13개월 연속 증가

-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5월 245명이 늘어나 7만 8,571명을 기록한 이래 13개월간 꾸준히 증가
- 총 2,794명이 증가해 5월말 기준 8만 1,120명을 돌파
- [증가 요인]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 증가
-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유입 정책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시행하여 정주 인구 및 생활 인구 확보에 힘씀
- [전입지원 정책 강화]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설 ▲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 고등학생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등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중
- 예산군은 2023년을 인구증가의 원년으로 삼고 ▲충남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산업단지 조성 ▲맞춤형 전입시책 추진 ▲출산장려시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 향후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군의 인구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

출처: 예산군 블로그 이모저모 게시글 제작성(2023. 6. 7.)

- ▶ 본 정보지에 게재된 글과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의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회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 본 정보지는 예산정책 관련 동향을 수집·가공한 자료이므로, 정보지를 인용하시기 전에 원 출처를 확인하신 후 원문을 바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